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법과 사회) 정답 및 해설

<정답>

1. ② 2. ④ 3. ③ 4. ② 5. ② 6. ⑤ 7. ① 8. ④ 9. ③ 10. ③
11. ⑤ 12. ① 13. ③ 14. ① 15. ② 16. ① 17. ⑤ 18. ⑤ 19. ② 20. ②

1. 신의 성실 원칙 이해

정답 해설 : ② 제시된 자료에서는 공통적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강조한 신의 성실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거래 관계에서 앞뒤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악의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을 노렸거나 채무자의 근소한 이행 지체를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는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상실시킨다.

오답피하기

- 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만이 중시된다.
③ 법률 불소급 원칙은 법률의 개정이 있을 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이 자료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는 원칙이다. 이 자료에서는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⑤ 일사 부재리 원칙은 형사 사건의 심리나 재판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2.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④ 그림의 법률 조항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해당한다. 을은 위험에 처한 사람의 구조를 법으로 강제할 것을 주장하므로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 연대성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법을 도덕의 최대한으로 보는 것은 도덕이라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을의 주장이다.
② 갑은 도덕적인 구조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보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반대할 것이다.
③ 을은 도덕의 분야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자체가 도덕적인 구조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법과 도덕의 관련성이 강하다. 이에 대해 갑은 반대하고 있지만 법과 도덕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을은 적극 찬성하고 있으므로 법과 도덕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3. 법의 적용 원칙 이해

정답 해설 : ㄴ. 헌법 재판소는 민법의 호주제 규정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으므로 상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었다.

ㄷ. 헌법 재판소는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민법은 법률로서 헌법의 하위법이다. 상하위법 관계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법률 우위 원칙이란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 행정의 원칙을 말한다. 민법의 호주제 규정은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한 것이므로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다.

4. 미성년자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규정 이해

정답 해설 : ㄱ. 연소 근로자는 하루 7시간 이내에서 일할 수 있지만, 휴게 시간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ㄷ. 사용자는 연소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오답피하기

ㄴ. 17세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며, 연소 근로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ㄹ. 연소 근로자의 근로를 보호자가 대리로 체결해서는 안 된다. 연소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연소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5. 근대 민법의 원칙과 수정 원칙의 이해

정답 해설 : ② ㉠은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서 사적 자치를 중시한다. 계약의 공공성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수정된 ㉡이다.

오답피하기

① ㉠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다. 개인의 소유권은 법에 의해 보장되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을 강조한다.

③ ㉡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주로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한 계약 체결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원칙이다.

④ ㉢은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서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⑤ ㉔은 무과실 책임 원칙이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기계 문명과 대규모의 집단 생활에서는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도 남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상황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관계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6.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법실증주의, (나)는 자연법론이다.

⑤ 자연법은 부당한 실정법을 개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을 개정할 때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는 자연법에 근거해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법론이 법실증주의에 비해 법률 개정의 한계를 인정하기가 쉽다.

오답피하기

① 법실증주의는 실정법만을 법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법률에 기초한 독재라면 불법이 아니라고 본다.

② 부당한 법의 집행에 저항할 수 있는 근거는 자연법에서 찾을 수 있다.

③ 법률 만능주의란 법률이라는 형식만 갖추면 그 내용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사상이다. 법실증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다. 자연법론은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질서에 기초한 법만을 주장하므로 법률 만능주의가 나타나기 어렵다.

④ 초(超)실정법적 인권이란 실정법을 초월한 인권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갖는 자연권을 말한다. 이러한 인권은 자연법론에서 인정하고 있다.

7.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법률안이 적법하게 통과되었으므로 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본다. 따라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ㄱ. 그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ㄴ. 갑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형식이 적법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도 정의에 합치해야 함을 강조한다.

오답피하기

ㄷ. 법률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이 정의롭지 못한 경우도 있다.

ㄹ. 공동체의 목적을 중시할 경우 합법적 독재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8. 양성 평등 노력의 이해

정답 해설 : ① 남자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신체 생리적인 차이 등)가 있으므로 성구별에 해당한다.

② 남자에게만 종종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년 여성에게도 종종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③ 부모 모두가 함께 육아의 책임이 있으므로 남성에게도 육아 휴직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④ 부계(父系)혈통주의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다.

⑤ 여성 공무원이 남성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경우 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9. 입양 제도의 구분

정답 해설 : (가)는 일반 입양, (나)는 친양자 입양이다.

ㄴ. 친양자 입양에서는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양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한다.

ㄷ. 일반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 모두 입양된 자는 양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간주된다.

오답피하기

ㄱ. 일반 입양에서 입양될 자는 입양할 자의 연령보다 낮으면 된다. 입양될 자의 연령을 확실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입양될 자가 15세 미만이어야 하는 것은 친양자 입양에서의 요건이다.

ㄹ. 일반 입양에 의해 입양된 자는 양부모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양자로 기재된다. 그러나 친양자로 입양된 자는 양부모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친생자로 기재된다.

10. 혼인의 법적 효과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ㄴ. 유모차 구입은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해당한다.

ㄷ. 병의 불법행위로 갑이 사망했으므로 배우자인 을은 병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혼인의 효력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발생한다. 따라서 실질적 요건인 혼인 합의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ㄹ. 정은 갑과 을의 아들이므로 정의 친권자는 갑과 을이다. 갑이 사망했으나 을(정의 모)이 있으므로 을이 정의 단독 친권자이다.

11. 담보 물권의 이해

정답 해설 : ⑤ 갑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은 법원에 갑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대금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게 된다.

오답피하기

①, ③ 근저당권은 채무 이행을 위한 담보로서의 권리를 가지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② 갑은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다. 갑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갑의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매매가액에서 채무액만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갑에 대한 ○○은행의 채권 최고액은 해당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

12. 사회법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① 제시된 법들은 사회법에 해당한다. 사회법은 사법(私法)영역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답피하기

②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타당한 법을 자연법이라고 한다.

③, ④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 간의 대등한 법률관계(계약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민법이나 상법 등 사법에서 중시되는 원칙이다.

⑤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시하려면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민주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법은 행정법 분야이다. 이러한 내용의 법은 국가가 법률관계의 주체이므로 공법에 해당한다.

13.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이해

정답 해설 : ㄴ. 갑은 혼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A와의 사이에서 자신이 을을 낳은 것은 분명하므로 을과 혈족 관계에 있다.

ㄷ. 병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했으므로 성년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이혼과 같은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갑은 만 19세로서 미성년자이지만 혼인 적령에 해당하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ㄷ. 자연인은 출생함으로써 권리 능력을 획득한다. 정은 이미 태어났으므로 권리 능력이 있다.

14.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가)는 의사 능력, (나)는 행위 무능력자이다. 고도의 정신병자, 술에 만취한 자는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판별할 능력이 없으므로 의사 무능력자이다.

ㄴ. 현행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오답피하기

ㄷ.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행위 무능력자로 결정된다. 성년자 중에서 정신 능력이 다소 결여되어 있더라도 법원에 의해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로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 능력자이다.

ㄷ. 행위 무능력자라고 해서 무조건 의사 무능력자는 아니다. 의사 능력의 유무는 법

를 행위를 할 당시의 정신 상태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15.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② 주인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팔게 되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새 주인 을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로 얻는데 임차인은 아직 입주를 안 한 상태이므로 대항력을 갖고 있지 않다. 즉,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이 집을 팔기 전에 이사를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새 주인 을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입주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획득한다.
- ③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갖추면 새 주인 을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우선 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우선 변제권은 임차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사례에서는 경매가 아니라 주택의 매매 문제이므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16. 학교 생활과 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① 헌법에서는 의무 교육의 범위를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초등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은 법률로 정하면 되므로 (나)에서 3년의 중등교육을 6년의 중등교육으로 개정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 ②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초등교육이 아닌 3년의 유아 교육만으로 의무 교육 기간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③ 헌법 재판소는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헌법 재판소에서 체벌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학칙 개정은 위헌이다.
- ④ (나)에 의해 중학교 과정은 의무 교육 기간에 해당하므로 중학교에서의 퇴학 처분은 (다)에 위반된다.
- ⑤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 교육 기간이 아니므로 (다)에 근거하여 퇴학 처분을 규정할 수 있다.

17.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의 이해

정답 해설 : 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다.

오답피하기

- ① 소비자 분쟁 사건에서 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위원회에서 내린 조정 결정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 ②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③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은 법체계상 명령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인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된다.
- ④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강제성이 없으므로 이 기준보다 유리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다.

18. 청약 철회의 이해

정답 해설 : ⑤ 원칙적으로 택배 포장을 뜯었을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지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오답피하기

- ① 질문자는 영업점이 아닌 승합차에서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도서를 구입했으므로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소비자는 서면이나 구두 등 어느 방식으로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
- ③ 일정 기간 내에 서면(내용 증명 우편)으로 청약 철회를 하면 발송한 날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정해진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할 경우 소비자는 해당 물품을 반환해야 하고, 판매자는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

19. 유언의 효력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② 유언으로 인해 배우자 B가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을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B뿐이며, 유언에 의해 이미 B가 전 재산의 1/2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한다.

오답피하기

- ① 전처와는 이미 혼인 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A는 갑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 ③ C는 을의 형제자매이므로 3순위 상속인이다. 1순위 상속인인 B가 있으므로 C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을의 유언이 없었다면 C는 을의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한다.
- ④ 유언의 효력은 유언장 작성일이 아니라 유언자의 사망일이다. 따라서 (다)는 2011년 5월 30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동일인이 여러 번의 유언을 했을 경우 가장 최근에 한 유언만이 효력을 갖는다. 따

라서 최종적으로 유효한 유언은 (다)이다.

20.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② 병의 부모는 을이 사용자로서의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손해배상은 당사자 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갑에게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 을은 사용자 책임을 물어 모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과실 상계란 피해자의 과실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병에게 과실이 없다면 과실 상계를 할 이유가 없다.
- ⑤ 배상액 합의 이후에 심각한 후유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후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므로 병은 을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